

‘챔스필드’ 운영권 재협약 사실상 마무리

광주시, 기아에 시설개선키 일정액 사회공헌출연 제안

일부 시민단체 “손익평가 애매한 합의” 무효 주장

난항을 겪어온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약’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동안 쟁점이던 손익평가 등에 대한 ‘애매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특혜 논란을 주장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야구장 손익평가위원회(손익위) 회의 결과 “25년 간 운영 시 기아차가 4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운영 과정에 흑자보다는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익금 환수는 어려운 대신 일정액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기아 측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재협약은 기아차가 챔피언스필드 구장 건설비 994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25년간(2014~2039년) 운영권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감사와 시민단체 문제 제기에 따라 2013년 1월 시작됐다.

이어 시와 기아차가 추천한 회계전문가, KBO 추천 야구전문가 등 5명이 손익위를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협의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은 무엇보다 수입과 지출문제로, 양 측이 흑자운영과 적자 운영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25년 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양측의 용역 분석 결과, 시는 ‘23억원 흑자’를, 기아차는

‘181억원 적자’를 예상하면서 양측의 이견차는 컸다. 시 용역에서는 수입 쪽에, 기아차 용역에선 지출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로 풀이됐다.

시는 야구장 광고와 공실 임대, 명칭 사용권 등을 수익에 반영한 반면 기아차는 시설개선키 51억원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이견을 보이며 양측은 평행선은 달랐다.

이에 손익위는 수 차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야구장의 1년 평균 수익을 45억원으로 결론짓는 등 대다수 쟁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관리비,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흑자와 적자 운영에 대해 ‘시와 기아 측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손익위는 대신 시설개선 비용의 차액분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기아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어서 출연 여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손익평가위 활동이 종료됐고, 25년간 40억 적자와 일정액 사회기부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재협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상생의 방안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운영한 광주시장과 기아 측 대표가 4일 기아타워에서 홈개막전을 전후로 재협약과 관련한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협약 무효까지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이번 여정적인 재협약 결과에 대한 잡음도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정남 시신 북한으로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협상 타결로 지난달 암살된 김정남의 시신이 지난달 30일 북한에 넘겨졌다. 사진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김정남 시신이 담긴 관.

/연합뉴스

‘체로키 파일’ 등 광주시 기증 美 언론인 팀 셔록

광주서 두달간 머물며 5·18관련 기밀문서 분석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정부 문서인 ‘체로키 파일’ 등을 광주시에 기증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팀 셔록(Tim Shorrock)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셔록은 4일 오전 11시 10분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서 지난 1월 시에 기증한 3530쪽 분량 59개 기밀문서에 대한 분석 계획을 설명했다.

셔록 기자가 기증한 자료에는 1979~1980년 당시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전문과 체로키 파일 문서, 미 국방부 및 중앙정보부 기밀문서가 포함됐다. 체로키 파일에는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 담당 비밀대책 팀

과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전문이 담겨 있다.

‘체로키’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자 카터 대통령이 한국 동향을 살피기 위해 비밀대책반(국무부·국방부·주한미국대사관 등)을 구성, 워싱턴~서울 사이의 특별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불인 암호명이다.

그동안 미공개 문건이었던 1979년 12월 생산된 국방부 관련 문서, 1980년 5월 광주 관련 일본의 역할에 관한 국방부 1

급 비밀교신 문서 등도 포함됐다.

셔록은 다음 달 말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이 기밀문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진 일자와 시간대별 분류 및 정리, 문서 해제 등을 작업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관측통의 광주 상황 보고서’ 등 미 정부 문서와 5·18 사건의 대조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계획 등을 소개한다. 셔록은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1996년 공개해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이달부터 기초연금액 20만6050원으로

부부가구 32만9680원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20만4010원에서 월 20만6050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만6400원에서 32만968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오른 기초연금액은 4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만4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법제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임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역 중기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정착

지난해 2조6000억 구매

시행 3년만에 전체의 84%

전남도가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가운데 80%가 넘는 2조6000억여원을 지역기업 제품으로 구매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년보다 261억원이 많은 2조6276억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3조1412억원)의 83.6%에 달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인 80%를 3.6% 초과 달성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는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도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물품 구매뿐 아니라 공사와 용역도 포함된다.

이 제도 도입 이후 2014년 71.2%였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이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사소한 소모품이라도 도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특수 소방장비 등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전국 입찰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2조770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예정액(3조2479억원)의 85.3%에 달하는 규모다. 구매 의무대상 기관도 20개 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춘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이므로 도와 시·군,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지원도 함께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산물 수출의 든든한 파트너

K·FISH가 함께합니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당신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사용업체
디자인 지원

통합브랜드
해외광고

수출지원사업
가점부여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
협회**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업체 모집

- 모집기간
- 연중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관리규정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대상 업체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적용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
-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권장) www.kfish.kr
- 오프라인 접수(www.korfish.or.kr 공지사항 참조)
-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운영위원회사용승인 ▶ 사용협약체결
- 문의사항
- (사)한국수산물회 (02-589-4620)